



2024.11.11.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13호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13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11월 11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03	02	05
문제제기		분석방법	
03	07	04	12
분석결과		시사점	



요약

■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중장기계획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34개 → 2022년 679개로 약 27% 증가)하고 있어, 계획 간 중복, 조정 미흡,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의 체계화·합리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사회정책분야 68개 정부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등 실시

- 중장기계획 간의 위계관계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다른 계획과의 연결 수(연결중심성), 네트워크 내 정보 흐름 조절 정도(매개중심성),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정도(근접중심성), PageRank(연결된 노드의 질적 중요성), 커뮤니티 탐지(Louvain 알고리즘으로 강하게 연결된 계획 집단 파악) 등을 검토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된 구조 도출

- 고용정책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주요 허브이며,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은 명기된 연계계획이 많아 중요한 위치 차지
-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은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매개중심성은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등, PageRank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중요한 위상을 점하는 것으로 확인
- 커뮤니티 탐지 결과, 30개의 커뮤니티로 분류되며, 고용, 보건, 사회복지, 인구, 주거 커뮤니티가 주요 집단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불필요한 중장기계획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계획 간 중복·유사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각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유사·중복 계획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 정부 중장기계획 간 조정을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

* 본 연구는 발간예정인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 중장기계획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모색

■ 국회는 기존에 수립된 중장기계획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깊이 있게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을 높이고 수많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우선순위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방안 모색
- 구체적으로, 국회의 개원 초기에 이전 국회에서 제정된 중장기계획 수립 조항을 포함한 법률들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1~2년 기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의원들이 기존 법률의 개정과 신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도록 지원

01

문제제기

- **중장기계획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10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수립되며,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과 같은 형태로 시행
 - 시행계획·실행계획과 구분되며 대체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기본계획과는 상이
 - 정부 중장기계획은 비구속적이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
 -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측면
 - 중장기계획의 주요 목적은 선거로 인한 정책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유지하는 것

- **정부 중장기계획은 2019년 534개(이채정 외, 2019)에서 2022년 679개(이광희 외, 2022)로 약 27% 증가하였고, 2024년 현재 총 중장기계획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
 - 정부 중장기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감사원(2016, 2021)은 중장기계획 간 중복과 비효율로 인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사례 다수 지적
 - 법률적으로 중장기계획 간 위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상·하위계획 간 관계가 불분명
 - 중장기계획 수립 주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계획 간 조정이 어려워 정책 간 비일관성 유발
 - 중장기계획은 정권에 바뀔 때마다 쉽게 변경되어, 잦은 장기적 정책목표 수정으로 실효성 저하 가능성
 - 중장기계획이 재정지출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
 - 중장기계획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관료 조직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 조직의 혁신을 저해하고, 신속한 문제 대응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 본 연구는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계성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정부 중장기계획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02

분석방법

- **사회정책분야 68개 중장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중장기계획의 구조 분석 수행**
 - 사회정책은 보건, 교육, 주택, 고용,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
 -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주요 사회복지 대상에 관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특정 보건분야 계획(예: 구강건강)과 외국인 일반 정책은 제외
 - 장관이 수립하지 않는 시행계획이나 개별 사업자 계획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8개의 중장기 사회정책 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확정
 -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의 법적 규정과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 간 위계적 관계와 연관계획 여부 등을 파악
 - 위계적 관계: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소속력이 있는 관계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참조하도록 규정
 - 연관계획: 동일한 층위에서 상호 참조하며 우선순위 없이 연결되는 계획들이 해당

-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network centrality analysis)과 커뮤니티 탐지(community detection) 분석을 적용하여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 분석**
 -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 노드: 개체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68개의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을 의미
 - 링크: 노드 간의 관계로, 위계적 관계(상·하위 계획)와 연관 관계로 구분
 - 위계적 관계는 방향성을 가지며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구속하거나 참조하는 반면, 연관 관계는 방향성이 없으며, 상호 참조하는 동등한 수준의 계획
 -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방법
 -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특정 노드가 몇 개의 다른 노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측정하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중장기계획은 네트워크 내 허브로 영향력이 높음
 -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 간 최단 경로에 얼마나 자주 위치하는지를 측정하며, 매개중심성이 높은 계획은 정보 흐름을 제어하며 불일치 시 전체 네트워크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침

-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짧을수록 중요한 노드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근접중심성이 높으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 다른 노드와의 빠른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연결로 인한 지나치게 긴 주기는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
- 고유벡터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중요한 노드와 많이 연결된 노드가 중요하다는 가정에서, 노드의 숫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드의 중심성까지 고려해 중심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PageRank 알고리즘은 고유벡터 중심성의 변형에 해당
- 커뮤니티 탐지 분석 방법
 - 커뮤니티 탐지: 네트워크 내 노드 간 강하게 연결된 집단을 식별
 - Louvain 알고리즘: 모듈성(modularity)을 최적화하여 커뮤니티를 탐지
 - 1단계: 각 노드를 임의의 커뮤니티에 배정한 후, 모듈성 개선이 있을 때만 소속 변경
 - 2단계: 커뮤니티를 단일 노드로 간주한 축소 네트워크를 생성해 최적화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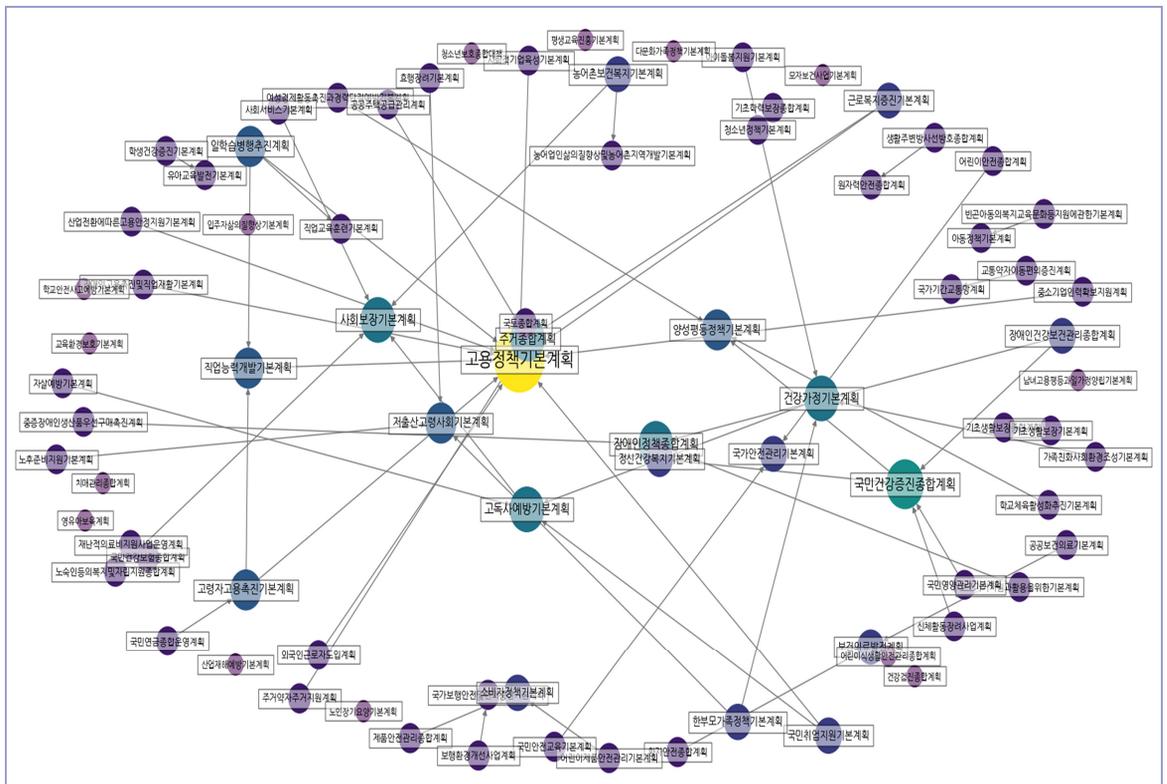
03

분석결과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구조 도출

- 네트워크 시각화에는 연결이 많은 노드끼리 서로 모이는 성질이 있어서 노드가 이론적 타당성을 갖도록 배치되는 장점을 가진 Python Networkx의 spring layout을 활용
- 노드는 각각의 사회정책 중장기계획을 의미하고, 링크는 상위 계획과 하위계획의 관계, 연관계획과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참조하는지 여부만을 의미
-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을 표준화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결중심성이 높은 고용정책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이 크게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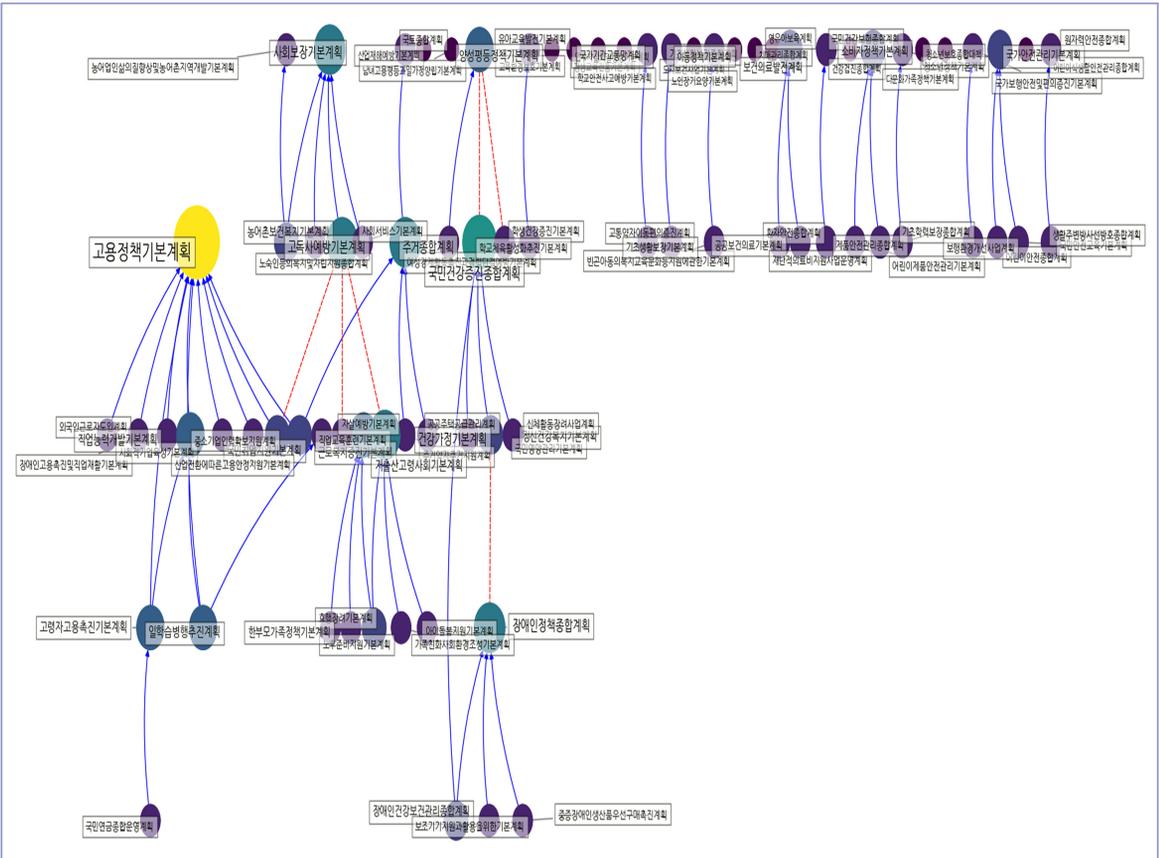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구조



■ 위계적 구조를 반영한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도 도출

- 현재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은 네트워크의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
 - 사회정책분야의 단절점은 19개, 네트워크 효율성은 0.06에 불과
 - 붉은색으로 표시한 링크는 연관계획의 관계
 - 예를 들어, 국토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이고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의 상위계획인 점은 구조도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정책기본계획과 농어촌보전복지기본계획은 동일한 차원의 계획이 아님에도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오역의 가능성
 - 본 연구는 명시적으로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경우만을 연관계획으로 보았는데, 연관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은 실제 연관성이 높다고보다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관계 측정 방식에 의한 것으로, 실제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전체의 연관성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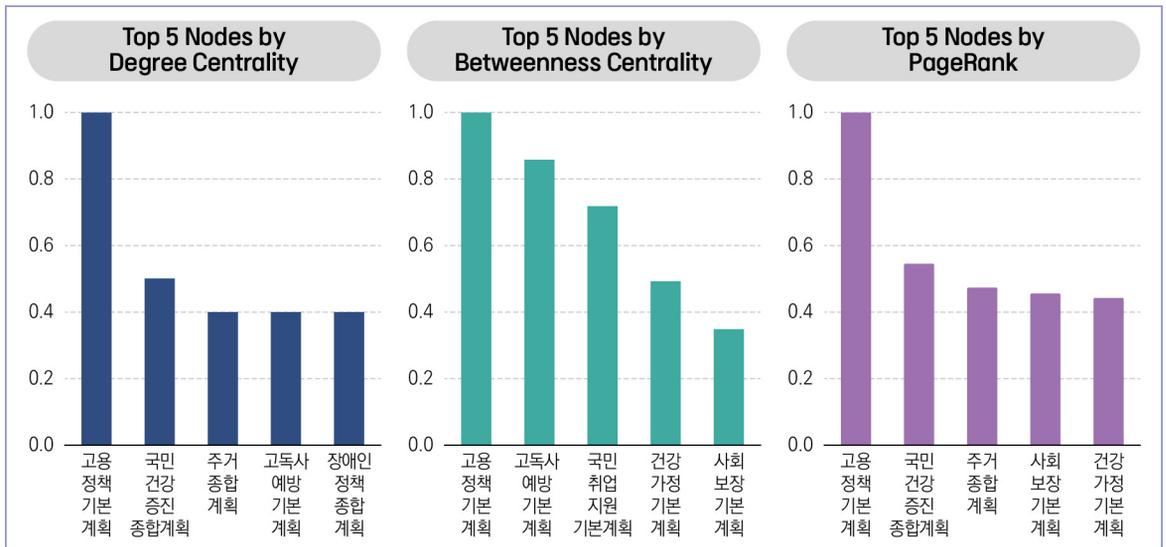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위계구조 도출



■ 무방향성 그래프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는 효율성이 낮고 파편화되어 있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검토할 때 방향성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 중심성은 더욱 낮게 도출
-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PageRank 측면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위 5개 계획을 도출
 - 각 중심성 계산 방식의 값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시각화를 위해 값들을 표준화

그림 3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계획은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파악

- 이상의 계획은 다른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의 변경은 전체 계획 네트워크에 많은 변화를 초래

■ 매개중심성이 높은 계획은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순으로 도출

-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계획인 고용정책기본계획은 매개중심성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나타났으나, 연결중심성에서는 중요한 계획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연계계획이 많은 고독사예방기본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
- 반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보건의관리종합계획, 보조기기지원과활용을위한 기본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 등의 상위계획으로 기능하지만 하위계획들이 다른 계획들과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개중심성이 낮게 나타남

■ **PageRank 알고리즘으로 살펴본 계획의 중심성은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순으로 파악**

- 대체로 연결중심성과 유사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ageRank 값이 큰 5개 계획은 연결중심성에 비해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같이 다른 계획의 상위계획인 계획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예를 들어, 연결중심성이 높은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자살예방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의 많은 연관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계획의 중요도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 PageRank는 고유벡터 중심성과 유사하게, 단순한 연결빈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방향성 네트워크에서도 상위 계획을 잘 식별하는 결과 도출 가능

■ **분석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심성이 모든 측정 방식에서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

- 연결중심성은 0.3(표준화), 매개중심성과 PageRank 값은 각각 0.18, 0.37로 산출
- 실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갖는 중요성이나 영향력과 달리, 법률의 규정이나 계획 자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중장기계획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효성이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Louvain 알고리즘을 활용한 커뮤니티 탐지 결과,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은 30개의 커뮤니티로 분류되어 파편적인 양상**

- 이는 사회정책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네트워크의 파편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
- 소속 계획이 가장 많은 커뮤니티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정책 커뮤니티(11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 커뮤니티(11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이 포함하는 사회보장 커뮤니티(8개),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인구 커뮤니티(7개) 순으로 도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효행장려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 아이돌봄지원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과 같은 커뮤니티에 포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다른 사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노인, 아동 등 보건복지부의 인구실 단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인 것처럼 보이는 위상

그림 4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커뮤니티 탐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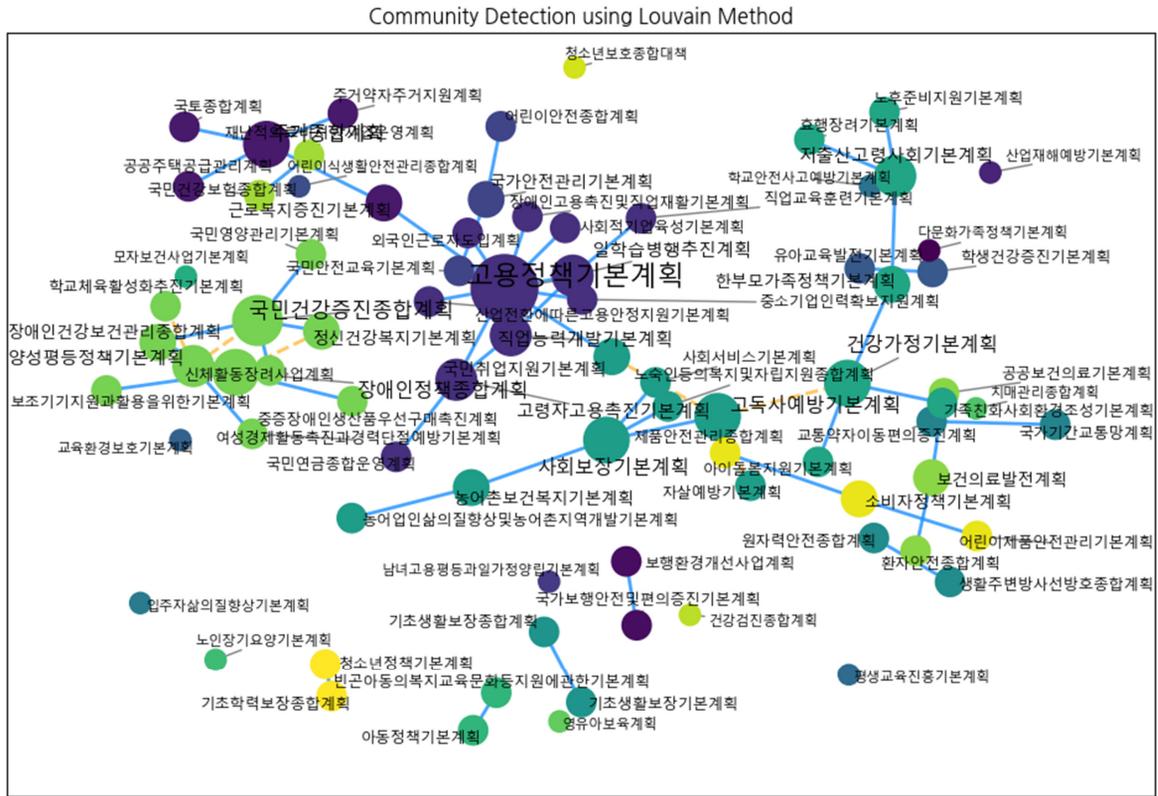


표 1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주요 커뮤니티

연번	커뮤니티	소속 계획
1	고용(11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일학습병행추진계획,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기본계획,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계획,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2	보건(11개)	여성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기본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조기기지원과활용을위한기본계획, 중증장애인생산물품수구매촉진계획,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신체활동장려사업계획, 학교체육활성화추진기본계획
3	사회보장(8개)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종합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사회서비스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계획,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4	인구(7개)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효행장려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아이돌봄지원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
5	주거(5개)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주거지원계획, 공공주택공급관리계획, 국토종합계획

04

시사점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개선 방안

- 불필요한 중장기계획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계획 간 중복·유사성 문제 해결해야 할 필요
- 각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유사·중복 계획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 예를 들어, 연관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최대한 일치시키거나 하위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 필요
- 정부 중장기계획 간 조정을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 여러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성
- 중장기계획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정부 중장기계획 증가에 대한 원인 검토

-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관료는 자신의 효용(봉급, 평판, 권력 등)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산 확대를 통해 효용 극대화 경향
 - 중장기계획은 일반적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의 설치와 시설, 설비·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예산 잉여는 관료의 인력·자본 확보 및 무형적 이익에 활용되고, 정치인은 중장기계획을 통한 조직·예산 신설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치적 책임의 분산으로 중장기계획 법제화가 우월전략
 - 관료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중장기계획은 필연적으로 증가하며, 중복된 계획이나 조정 문제가 부처에 전가되어 비효율이 발생
- 정책확장(policy expansion)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의 채택을 내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관할 부처의 대응이라고 전제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일회적인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수립 필요

- 정책확장은 정책 수립에 대한 압력이 해소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에 대한 관료의 대응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경향을 보임
 - 즉, 발전국가의 경험을 통해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정책확장의 사례에 해당
 - 정부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법제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이므로, 국회에서의 상례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는 루틴(routine)이 작동
 - 조직루틴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데, 의사결정자가 주의를 집중하면 루틴에서 벗어난 의식적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위가 집중되지 않을 때는 상황의존적 또는 환경반응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적 의사결정이 나타남
 -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상례화된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거나 체계자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법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자의 주위가 집중되지 않음에 따라 조직루틴에 의거한 무비판적 답습이 이루어진 결과로 중장기계획이 증가했을 가능성
- **국회는 기존에 수립된 중장기계획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깊이 있게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을 높이고 수많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우선순위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방안 모색
 - 구체적으로, 국회의 개원 초기에 이전 국회에서 제정된 중장기계획 수립 조항을 포함한 법률들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1~2년 기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의원들이 기존 법률의 개정과 신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도록 지원

참고문헌

- 김사원(2016).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실태 감사보고서.
_____(2021).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보고서.
- 강홍열(2019).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미래예견적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 김윤권 외.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권영섭, 김선희, 하수정, 정우성, 한지우(201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경동, 이시영, 고길곤(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고용정책 프레임 연구: 언론기사 및 국회회의록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 135-163.
- 김재윤(2021).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22). 특별법 중심 입법이 법체계에 미친 영향: 법률간 인용에 대한 종단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4(1), 161-194.
- 이광희, 박준(2022). 국가법정계획의 범정부적 실행력 강화방안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이영인, 김종학, 장현호, 박찬운(2010). 교통관련 법정계획의 체계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이채정(2019).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Arnold, G., & Long, L. A. N.(2019). Policy expansion in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y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9(4), 465-476.
- Baumgartner, F. R., & Jones, B. D.(2010).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ondel, V. D., Guillaume, J. L., Lambiotte, R., & Lefebvre, E.(2008). Fast unfolding of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08(10), P10008.
- Boehmke, F. J., & Witmer, R.(2004). Disentangling diffusion: The effects of social learning and economic competition on state policy innovation and expans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1), 39-51.
- Brin, S., & Page, L.(1998). The anatomy of a large-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 Computer networks and ISDN systems, 30(1-7), 107-117.

- Bryson, J. M.**(2018). Strategic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 guide to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organizational achievement. John Wiley & Sons.
- Dror, Y.**(1983).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Routledge.
- Hood, C.**(1986). The tools of government. Chatham: Chatham House Publishers.
- Hrebiniak, L. G.**(2005). Making strategy work: Leading effective execution and change. Ft Press.
- Ma, N., Guan, J., & Zhao, Y.**(2008). Bringing PageRank to the citation analysi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4(2), 800–810.
- Majone, G.**(1989).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 McKeown, T. J.**(2008). Organizational Routines in Political Science. Handbook of Organizational Routines. Cheltenham: Edward Elgar, 31–51.
- Migue, J. L., & Belanger, G.**(1974). Toward a general theory of managerial discretion. Public choice, 17, 27–51.
- Newman, M. E. J.**(2006). Modularity and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23), 8577–8582.
- Niskanen, W. A.**(1971). Bureaucracy &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Aldine–Atherton.
- _____ (1975). Bureaucrats and Politician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3), 617–643.
- _____ (1991). A Reflection o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Blais, A., & Dion, S. (Eds.). (1991). The budget-maximizing bureaucrat: Appraisals and evidence(pp. 13–32).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asio, W.**(1997). Towards an attention-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S1), 187–206.
- Peters, B. G.**(2006). Concepts and Theories of Horizontal Policy. Management. In Peters, B. G., & Pierre, J. (eds.), Handbook of Public Policy. Sage.
- Pierre, J., & Peters, B. G.**(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Bloomsbury Publishing.

Pierson, P.(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Robinson, S. E., & Meier, K. J.(2006). Path Dependence and Organizational Behavior: Bureaucracy and Social Promotion.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6(3), 241–260.

Shipan, Charles, and Craig Volden.(2006). Bottom-Up Federalism: The Diffusion of Anti-Smoking Policies from U.S. Cities to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4): 825–43.

Spicker, P.(2014). *Social policy: Theory and practice*. Policy Press.

Wildavsky, A.(1973). If planning is everything, maybe it's nothing. *Policy sciences*, 4(2), 127-153.

_____ (1979). *Speaking truth to power: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Routledge.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